26호 Issue & Review on Democracy

1970~80년대 '고문' 관련 시설의 운용과 변화 : 서빙고 보안사, 남산 안기부, 남영동 대공분실을 중심으로

정 호 기
원광대학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HK+연구교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1970~80년대 ‘고문’ 관련 시설의 운용과 변화 : 서빙고 보안사, 남산 안기부, 남영동 대공분실을 중심으로

정 호 기
원광대학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HK+연구교수

01 국가폭력과 고문

예로부터 인간은 불안과 위협 그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safety)'을 갈구해왔다. 타인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지 못했던 개인은 집단차원에서 공동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했다. 그것은 질서의 확립으로 표출되었는데, 지도자와 엘리트가 권한을 갖고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 공동의 안전을 보장하기로 하고 통치권을 위임받은 권력자들은 순응하지 않은 자들에게 각종 조치를 취했다. 이들은 법률들을 제정 및 공포했으며, 법률 위반자들을 기록하고, 권한이 미치는 영토에서 각종 소식과 정보를 수집했다. 그리고 불응자는 특정한 장소와 시설에 감금했다. 또한 행동이 특이하거나 이목을 끄는 사람들 혹은 부적응자는 추방하거나 공개처형했다(Sofsky, 2010: 9~13).

사회가 발전하고 체계화될수록, 공적인 폭력은 더욱 합법적인 구조와 기반을 갖추었고, 정교화 및 정당화되었다. 국가는 직접 부당한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으며, 다양한 방식의 사적인 폭력이 실행되도록 조장 및 후원했다(조현연, 2000: 17). 일반적으로 이러한 폭력은 강압성과 직접성을 띠었는데, 여기에는 국가가 놓인 여러 환경과 정세의 영향 그리고 동의에 기반을 둔 헤게모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국가폭력이 자행되는 양상과 경로는 흡사했다. 기본적인 원리는 공동의 안전을 위협하고 위해한다고 간주한 이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비인간 혹은 무생물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국가의 이름으로 사회구성원에게 불법적인 체포, 구금, 고문, 감금 등이 자행되었고, 이를 경험한 사회구성원은 두려움과 공포를 체현했다.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국가폭력은 '고문(torture)'이다(박영주 · 신행우, 2007). 고문은 파괴력이 가장 강한 지배 기술임에 틀림없다. 일반적으로 고문의 주요 대상자들은 하층민, 아웃사이더, 사회 부적응자였다. 고문은 '동질적인 사회의 핵심 영역에 속하지 않는 모든 사회 범주를 장악하고, 나 이외의 다른 것에 대항해 싸운 기술이자 사회적인 분할과 배제의 도구였다'(Sofsky, 2010: 120~124). 고문의 희생자들은 가해자의 의지와 분노, 욕망과 절멸 의지에 따라 일방적으로 다루어진다. 근대에 고문이 행해지는 공간에는 고문 하수인과 이를 지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함께 했던 상급자가 있었다. 상급자는 고문 행위에서의 위계질서를 대변하며, 통치권을 대리한다(Sofsky, 2010: 126~127).

과거의 고문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과시적으로 실행되었다면, 오늘날에는 은밀한 곳에서 비

밀리에 이루어진다(KRCT, 2004: 25). 외부와 단절된 채,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고문을 당한 희생자의 육체와 영혼은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하다. 박종철과 같이 고문의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도 상당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후유증으로 질환을 앓다가 유명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이다. 고문의 기법(techniques)은 신체적, 심리적, 복합적 기법으로 구분된다(KRCT, 2004: 52~71). 신체적 고문은 적용방법에 따라 구타고문, 치아고문, 매달기고문, 강요된 자세고문, 전기고문, 질식고문, 절단고문, 화상고문 등으로 분류된다. 심리적 고문은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 심리적으로 두려움을 유발하고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는 박탈기법, 강압기법, 의사소통 악용기법, 약물 · 침 · 정신병원 악용기법 등이 있다. 끝으로 복합적 기법은 신체적 · 심리적 고문을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성고문이 대표적이다.

한국의 역사에서도 국가폭력과 고문의 사례들은 쉽게 찾을 수 있다. 1900년대에 들어 한국에서 국가폭력과 고문이 한층 심화되었던 것은 근대화와 식민지화가 중첩되었던 것에서 연유한다.[1] 불행히도 이러한 식민지시기의 통치방식과 고문의 유산은 광복 이후 적절하게 청산되지 않았고, 이승만 정부 이래 199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다(박원순, 2006a: 17). 김대중 정부 이후에는 고문이 사라졌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공안분실'에서 '보안분실'로 이름을 바꾼 각종 시설들은 계속 운영되었다.[2] 이러한 고문에 의한 통치가 가능했던 것은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각종 공안 법률들과 이를 집행할 기관들이 굳건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이 주목하는 것은 국가폭력과 고문이 자행되었던 대표적인 장소 혹은 건물들이다. 고문을 수행한 국가기관, 장소, 건물은 다양한데, 대표적인 기관들은 국군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 그리고 치안본부의 대공부와 같은 정보기관들이었다. 이들 기관은 개칭과 조직 개편 및 확대 등으로 현존하지 않고, 관련 장소 및 건물의 이전과 해체 등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국가폭력과 고문에 큰 책임이 있는 정보기관들의 설립과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고문 관련 시설들의 역할과 기억 그리고 현재성을 고찰할 것이다.

1) 이는 1929년 광주학생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와 고문의 진상을 기록한 글에서 잘 확인된다(안진, 1995: 290~295).

2) '당신의 집 근처에 공포의 '하얀 방'이 있다.' 「한겨레」. 2012. 10. 18.

02 정보기관들의 설립과 변화

광복 이후 가장 먼저 정보기관을 설립한 것은 군대였다. 1945년 11월 13일 미 군정청이 군정법령 제28호를 공포하여 남조선과도정부 국방사령부를 설치하여 정보과를 편성한 것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2004: 330). 정보과는 1947년 국방경비대 정보처로, 1948년 국군정보국으로, 한국전쟁 중 육군본부 직할대 특무대로, 1960년 방첩대로, 1968년 육군보안사령부로, 그리고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개편 및 확대되었다(안영배, 1990). 육군보안사령부는 1968년 9월 23일 제정된 대통령령 제3593호에 의거하여, 국군보안사령부는 1977년 9월 26일 제정된 대통령령 제8704호에 의거하여 설치와 임무 등이 규정되었다(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2004: 331~332). 이 법령에서 규정한 보안부대는 보안사령부와 각 군 본부 보안부대, 부대지원 보안부대, 통신보안부대 및 보안학교로 구성되었다.

보안사는 군사보안 및 군 방첩에 관한 사항, 군법회의법 제44조 제2호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군 및 군과 관련이 있는 첩보의 수집, 처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것을 임무로 했다. 보안사는 '간첩' 관련 사건의 경우 직접 수사를 했고, 이 과정에서 민간인들에 대한 조사와 가혹행위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보안사의 활동은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는데, 박정희 시대에 확대되었고, 신군부 집권기에 더욱 강화되었다. 보안사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되었던 것은 신군부의 권력찬탈과 관계가 깊다. 왜냐하면 전두환은 12 · 12군사쿠데타에서 시작하여 5 · 17군사쿠데타로 국가권력을 장악한 이후에도 보안사령관의 직책을 유지했으며, 후임은 노태우와 박준병이었기 때문이다. 1990년 윤석양 일병이 보안사가 민간인을 사찰하고 있다는 '청명계획'을 폭로한 것을 계기로 국군기무사령부로 개칭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였으나, 과거의 행태를 근절하지 않아 계속 사회문제가 되었다.

중앙정보부는 보안사에 비해 한참 늦은 1961년 6월 10일 법률 제619호로 제정된 「중앙정보부법」에 의거해 창설되었다. 중앙정보부를 창설한 주요 목적은 반혁명 세력과 간첩 색출 그리고 국가안보 관련 정보활동이었다. 중앙정보부는 5 · 16군사정변을 일으킨 군부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정보기관으로 탄생했다. 중앙정보부와 유사한 기관의 설립이 4월혁명 이후 출범한 장면 정부에서 이미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지원을 받아 추진되고 있었는데(한성훈, 2013: 114), 5 · 16군사정변이 발발하면서 더욱

강력한 힘과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다고 한다.

중앙정보부는 정치적 격변기 혹은 전환기에 정국을 경색하게 하고, 안보의식을 극대화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중앙정보부는 보안사와 경쟁 혹은 협력관계에 있었으나, 박정희 시대에는 공안사건들을 압도적으로 많이 발표했다. 중앙정보부의 위상은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의 살해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면서 정보기관들의 위상에서 다소 뒷전으로 밀렸으나, 1981년 4월 8일 국가안전기획부로 재활했다. 이후 안기부는 다양한 간첩사건과 공안사건을 기획 및 발표하는 등 사실상 정권을 지켜내는 핵심적인 기관으로 활동했는데,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지 1년여 만인 1999년 1월 국가정보원으로 개칭했다(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2004: 340~341).

미 군정청은 1945년 9월 26일과 29일 시민 무장의 해제와 무기 회수 및 소지 금지 등에 관한 법령을 공표했다. 이는 경찰 업무에 해당되었다. 경찰 조직은 1945년 10월 21일 미 군정청이 경무국을 창설하면서 공식화되었다. 경무국은 관방, 총무과, 공안과, 수사과, 통신사과를 두었고, 도지사 산하 경무부에는 경무과, 보안과, 형사과, 경제과, 정보과, 소방과, 위생과를 두었다(이윤정, 2015: 156~157). 정부가 수립되면서 경찰 조직은 내무부 치안국이 되었다. 이것은 경찰 조직의 위상을 격하하고, 예산 및 인력과 기구를 축소한 것이다. 여기에는 일제강점기와 미군정시기의 경찰의 횡포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반감이 작용했다. 경찰 업무에서 정보 분야의 조직이 독립된 것은 1948년 11월 4일 발표된 대통령령 제18호에 의해서였다(이윤정, 2015: 197~200).

1974년 12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개편했다. 이러한 변화에는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장의 사건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그리고 1990년 12월 27일 개정된 정부조직법과 1991년 5월에 제정된 경찰법에 의거하여 1991년 8월 1일 내무부 산하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했다.

경찰이 대공 업무를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였다. 1974년 12월에 기존 특수정보과를 이어받은 정보과가 1981년 6월 대공과로 신설되면서 업무가 확대되었다.[3] 그리고 1986년 1월에 치안본부 4부를 신설하고 대공부를 설치했는데, 대공1과, 대공2과, 대공수사과를 두었다. 대공부는 그해 6월에 조직이 확대 강화되어 대공1부, 대공2부, 대공3부에 총 9개 과가 편재되었다(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2003: 317).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대공업무가 강화되었던 것이다. 치안본부의 대공부는 간첩사건 수사보다 사회운동에 대한 탄압과 수사에 더 큰 비중을 두고 활동했다. 1987년 1월 14일 서울대학교 박종철 학생을 고문하여 사망하게 하고 이를 은폐했던 것은 대공2부의 대공수사 2과였다(이정훈, 2004). 경찰청은 출범과 함께 제5조정관을 보안국으로 개칭하고, '대공'을 '보안'으로 변경했다.

3) 대공과의 업무는 ① 대공경찰에 관한 기획 및 지도, ② 대공에 관한 첩보수집 및 분석, ③ 간첩 및 사회 안전 사범에 대한 수사 및 수사지도 등이었다(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2003: 318).

03 고문 관련 시설들의 역할과 기억

1) 서빙고 보안사 대공분실

보안사는 서빙고와 옥인동 등에 대공분실을 두었다. 서빙고에는 1957년 보안사의 전신인 육군본부 특무대가 둥지를 틀었다. 서빙고의 정보기관은 수차례 이름이 바뀌었는데, 1972년 10월 유신 이후에는 주로 '(서)빙고호텔'로 불렸다. 서빙고 대공분실의 초반 상황은 『옥중 19년』에서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이었던 서승은 1971년에 3월 6일 옥인동 대공분실로 연행되었다. 1차 심문을 마친 그는 서빙고 대공분실로 이송되었다. 당시 서빙고 대공분실의 건물이 신축 중이어서 사무실과 내무반은 콘센트 막사였고, 수감시설은 합판으로 만든 독방이었다. 독방은 폭 2m 길이 2.5m 가량이었으며, 책상과 의자 그리고 이부자리 한 채가 있었다. 문에는 감시창이 있었고, 문 밖에 잠금장치가 있었다. 독방은 반원통 모양의 막사 지붕을 따라 배치되었고, 천장에는 백열전등이 달려 있었다. 키 높이의 조그만 창에는 철망이 쳐져 있었다. 서승은 이곳에서 매일 자술서를 작성했고, 수시로 호출되어 심문을 받았다. 수사관이 서승에게 요구한 것은 북한과의 관계를 인정하라는 것이었다. 수사관은 잠을 재우지 않고 도구와 신체 등으로 폭력을 가했다. 서승은 2주만에 석방되었다가 4월 중순에 다시 서빙고 대공분실로 연행되었다. 또 다시 시작된 폭행과 고문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 서승은 머리부터 기름을 끼얹고 불을 붙였다. 서승은 머리와 팔, 손 등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19년 동안 수감되었다(서승, 2018: 33~39).

보안사는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하고, 이른바 '정화 조치'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 합동수사단, 총무처, 정보처, 안전처 등으로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었는데, 불교계 탄압을 주도했던 것은 보안사였다(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2007). 국보위와 신군부는 비우호적이었던 불교계를 타깃으로 삼았다. 합동수사단은 1980년 10월 27일 새벽 4시 전국의 주요 사찰과 조계종 총무원을 침탈했다. 계엄사령부는 10월 30일 군 · 경합동수색대를 편성하여 전국 사찰을 일제히 유린했다(유응오 2005: 13). 보안사는 부정축재 자금 은닉과 사음행위에 초점을 맞춰 조사했다. 10 · 27법난 피해자들은 서울을 비롯해 각 지역 보안부대와 경찰청 특수수사대로 연행되었는데, 모든 곳에서 폭행, 가혹행위, 고문 등이

자행되었다.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던 월주 스님도 보안사 서빙고 대공분실로 연행되었다. 불교계의 지위 상 월주 스님에게는 구타나 가혹행위가 없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처님의 가호가 없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당시 문공부 종무담당관이었던 한영수였다. 그는 며칠 후 서빙고 대공분실로 연행되었는데, 다음과 같이 고초를 겪었다고 증언했다.

> 서빙고에 끌려간 후부터 한 씨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다. 군인들은 그를 짐승 취급했다. 서빙고에 당도하자마자 그는 알몸이 돼야 했다. 군인들은 살의(殺意)에 찬 눈빛으로 쏘아보며 군홧발로 온몸을 걷어찼다. ……
>
> 수사하는 내내 고문은 이어졌다. 고춧가루 탄 물을 코에 들이붓는가 하면, 전기고문을 하기도 했다. 기골이 장대한 한 씨였지만 무자비한 고문 앞에서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고문방법은 잔혹했으며, 또한 교활했다. ……
>
> 그들은 실신할 정도로 두드려 팬 후 몸에 든 멍을 지우기 위해 소염제를 온몸에 바르게 한 후 온수 목욕을 시켰다. 심지어 간호사들이 건강을 체크하기도 했다. (유응오, 2005: 171~172)

서빙고 대공분실의 존재와 악명이 사람들에게 보다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1983년 10월 19일 보안사가 북한과 연계된 재일조선인들을 주축으로 하는 4개의 간첩망 16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한 것이었다. 연세대학교 대학원생이었던 김병진도 그 가운데 한 명이었다. 그는 1988년 『보안사』라는 책을 출판하여 이 사건의 내막과 진상을 폭로했다. 그는 7월 9일 봉천동 소재 자택 입구에서 서빙고 대공분실로 연행되었다. 수사관들은 김병진을 협박, 심문하고, 부인을 위협 및 가택 수색했다. 그는 VIP실에서 조사와 고문을 당했는데,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 작은 방이었다. 방의 불빛은 지금까지와 같은 형광등이 아니라 벌거숭이 백열전구였다. 나는 철제의자에 앉혀졌다. 옷은 몸에서 벗겨지고, 몇 번씩이나 저항했지만 양손과 양발을 그 의자에 묶어 버렸다. 내가 앉은 의자는 상하로 움직여지는 것 같았고 역시 철제로 만들어진 의자이기에 대좌는 불안정했다. 지치지도 않는지 험담과 욕설을 되풀이하던 그들은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어떤 스위치를 넣었다.
>
> 나의 몸은 의자에 묶인 채 밑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캄캄했다. 주위의 윤곽마저 파악할 수 없는 칠흑 같은 곳이었다. 순간, 숨이 멈출 것 같은 공포를 느꼈다. 위에서 이덕룡이 호통을 쳤다. (김병진, 1988: 50~51)

보안사는 서승 · 서준식 형제 사건 이후에도 재일한국인을 간첩으로 조작하는 작업을 계속했다. 김병진의 연행과 조사 그리고 고문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4]

재일한국인은 간첩 누명을 씌우기에 가장 좋은 대상들이었고, 당국의 발표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그들은 대부분 증거에 의해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회유, 협박, 고문의 수순을 밟았고, 이를 견딜 수 없어 간첩이나 용공분자가 되었다(오태영, 2017: 214~215).

치외법권에 있던 보안사는 민간인 사찰도 서슴지 않았다. 군인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그들의 명단과 이력 그리고 활동 내역을 관리한다는 소문은 일찍이 있었다. 이는 1990년 10월 서빙고 대공분실에서 근무하던 윤석양 이병이 민간인 1,303명에 대한 사찰 기록과 정보를 폭로하면서 사실로 입증되었다. 서빙고 대공분실의 실체 일부가 드러난 것이었다. 1989년 정기국회에서 보안사의 기구축소를 밝혔지만, 여전히 막강한 조직과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 사건이기도 했다. 야당과 언론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 학생단체들은 보안사의 해체와 유사한 일의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그리하여 1990년 11월 서빙고 대공분실이 폐쇄되었다(안영배, 1991).

2) 남산 안기부

남산 안기부에서 조사를 받았던 사람들은 부지기수였다. 유신시대에 안기부가 발표한 대표적인 사건들과 고문행위가 널리 알려진 사건들은 1973년 서울대학교 최종길 교수 사망사건, 1974년 인민혁명당재건위원회(인혁당재건위)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합(이하 민청학련)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최종길 교수는 1973년 10월 16일 중앙정보부에서 근무하던 동생 최종선과 함께 자진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3일 뒤인 10월 19일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중앙정보부는 일주일 후인 10월 25일 "최종길이 간첩혐의를 자백하고 중앙정보부 건물 7층 화장실 창문을 통해 투신자살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2년 최종길의 죽음에 잠 안 재우기, 모욕 등의 언어폭력, 발길질, 주먹질, 몽둥이질 등의 심한 구타, 각목을 무릎에 끼워 발로 밟기 등 상당한 정도의 고문과 협박이 있었으며(김학민, 2017: 426), 자백 강요를 끝까지 거부했다고 밝히고,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06년 국가가 유가족에게 1,848백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인혁당재건위와 민청학련사건은 1974년 4월 25일 중앙정보부가 발표하면서 공개되었다. 중앙정보부는 민청학련이 조총련 · 인민혁명당과 결탁하여 국가변란을 기도했다고 규정하고,

4) 보안사 장지동분실에서도 재일한국인에 대한 간첩조작이 이루어졌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윤정헌은 1984년에 연행되어 1988년 6월에 석방되었다. 그는 재심을 신청하여 2011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보안사 고문 수사관보다 조작 추인한 판검사가 더 밉다.' 「한겨레」. 2008. 5. 5.

총 1,034명을 검거하여 민청학련 관련자 57명, 인혁당재건위 관련자 24명, 재야인사 7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사법부는 1975년 4월 8일 관련자 8명에게 사형, 8명에게 무기징역, 6명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며, 형이 확정된 지 18시간 만에 8명에게 사형을 집행했다. 사건 관련자들이 폭력과 고문에 의한 조작과 고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했던 바(재경대구경북민주동우회 외, 2005),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이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서에 적시했다.

> 도예종은 "중정 취조시에 협심증까지 일으켜 수차 졸도하는 등 만신창이가 되었다. 이때 중정에서 사준 외제응급 협심증 치료제인 설하정, 리트로그리셀린정을 먹고 회복이 되었는데 약을 현재 보관하고 있다"는 등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을 구체적으로 진술(상고이유서)
>
> 김용원은 "중정에서 진술서를 수사관들이 꾸민 원본을 베껴 쓰라고 하여 거부했더니 몽둥이질을 해서 왼쪽 눈썹 위가 찢어져 피가 줄줄 흘렀다"고 주장(상고이유서)
>
> 하재완은 "혹독한 고문으로 탈장이 되었으며, 탈홍이 되고, 폐농양이 생겨 취조관이 시키는 대로 조서가 작성되었다"고 진술(상고이유서)
>
> ……
>
> 여정남은 장기간에 걸친 취조 과정에서 잠 안 재우기 고문과 구타 · 전기고문 · 물고문 등 각종 고문이 본인에게 가해졌으며, 극도의 쇠약한 몸으로 주사를 맞아가며 재판에 임했다고 주장
>
> 전창일은 당시 중정 밀실에서 행해진 가혹한 물고문 · 전기고문 · 잠 안 재우기 · 몽둥이찜질 등 온갖 비인간적 만행으로 하재완은 탈장이 되고 항문이 빠지며 폐종양에 시달렸고, 서도원 · 이수병 · 김용원은 혼절한 채 업혀 나오고 업혀 들어오는 참담한 고문이 계속되었다고 주장. (국가정보원, 2007: 254~257)

중앙정보부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간첩(단)사건을 발표했다. 1975년 3월 유종식 사건, 1975년 11월 재일동포 유학생 사건, 1978년 조상록 사건, 1979년 3월 크리스천아카데미 사건, 1979년 4월 통일혁명당 재건기도사건 등은 하나같이 간첩활동을 한 것이거나 북한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조작되었다(박원순, 2006b: 373~386). 이러한 일은 중앙정보부가 박정희 시해사건에 연계되어 잠시 위축되던 시기에만 잠잠했다. 안기부로 개칭한 뒤로도 남산에 수많은 사람들이 연행되었고, 폭행과 위협 그리고 고문 등을 동반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서경환 의원, 문익환 목사, 김현희, 이수근, 임수경 등이 남산본부에서 조사를 받고 겁박 혹은 고문을 당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안기부의 활약과 고문 행위는 계속되었다. 안기부가 1993년 9월 24일 보도자료를 배포한 '김석삼 김은주 남매 간첩사건'이 한 사례이다. 문민정부에서의

첫 간첩사건에 연루된 두 사람은 9월 8일에 각각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고, 안기부에서 조사를 받았다. 가족이 이들의 소재를 확인한 것은 연행된 지 45일째였던 10월 23일이었다. 이 사건은 안기부 프락치 백인오(남누리영상 대표)의 양심선언 등으로 1994년 말까지 조작 논란이 계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1997년 9월 30일에 석방되었다.[5] 가족과 변호사의 접견에서 파악된 두 사람에 대한 가혹행위와 고문은 다음과 같다.

> "연행된 지 일주일째인 9월 15일엔 안기부 내 화장실에서 수사관이 남편의 성기를 칫솔로 문지르고 손으로 만지는가 하면 입에 담지 못한 갖가지 성적 모욕과 폭언을 했다고 하더군요."
>
> 김은주 씨 역시 마찬가지. 잠을 안 재우는 건 물론이고 무릎을 꿇리고 바닥에 앉힌 후 양손을 쳐들게 하거나, 머리를 잡아당겨 벽에 짓찧고 뺨을 때리는 등 신체적 위해를 가하며 허위자백을 강요했다.
>
> 조사 도중 "이거 안되겠구만, 다른 방으로 데려가? 옷을 벗겨야 정신 차리겠군.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아볼래" 등의 성적 협박을 비롯해 …… 심한 성적 희롱과 모욕을 당했다는 게 김은주 씨의 말이다. (김희경, 1993: 185)

박종대 부부의 경우는 1996년 10월 독일 유학 중 방학을 맞아 일시 귀국했다가 안기부에 연행되었다. 안기부는 북한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조사했다. 박종대가 재독교포 김용무를 만난 것을 문제 삼았다. 박종대는 국가기밀누설죄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기소되었는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박종대는 안기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폭행과 고문을 당했다. "앉은 자세에서 안경을 벗긴 채 뺨을 후려치는 것은 가장 낮은 수준의 폭행이었다. 일으켜 세워, 상처를 남기지 않기 위해 입을 꼭 다물게 한 채 주먹으로 얼굴을 난타했고, 가슴과 아랫배, 다리까지 온전히 그들에게 맡겨져 있었다. 기구를 쓰진 않았지만 인간의 손과 다리 그리고 눈빛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 줄 새삼 깨달았다(박종대, 1999: 90~91)."

3)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

치안본부는 신길동, 옥인동, 장안동 등에 대공업무의 사무실을 두었는데, 남영동 대공분실은

5) ''김삼석 · 김은주 남매간첩단 사건'의 김삼석 씨의 인터뷰.' 「참세상」. 1997. 10. 11.

폭력과 고문으로 악명을 날렸다. 이곳으로 연행되어 고문을 당했던 사람과 사건 가운데 1970년대는 '남조선민족해방전선'(이하 남민전)사건 관련자들이 있었다. 남민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던 '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 회원 이재오도 이곳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는 알몸으로 물고문과 고춧가루 고문 등을 당했다고 증언한다(박원순, 2006b: 387~389).

남영동 대공분실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은 문용식 및 김근태에 대한 고문과 박종철의 고문치사 사건이었다. 1980년대 중반에 이루어진 이 일은 전두환 정권의 반인권성과 권위주의 통치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다. 문용식은 비공개 학생운동 조직이었던 '민주화추진위원회'(이하 민추위)의 배후로 규정되었다. 수사관은 '민주화청년운동연합'(이하 민청련)의 지도이념이 북한의 '민족해방 인민민주의의 혁명전략 및 통일전선전술'에 부합하며, 민청련-민추위-전학련 삼민투로 연결된다고 정리했다. 1985년 8월 28일 체포된 문용식은 이곳에서 9월 20일까지 조사를 받았는데, 칠성판 위에서 물고문을 당했다. 검찰은 폭력과 고문 그리고 공포심에 의해 만든 경찰의 조서를 그대로 인용했다(박원순, 2006c: 168~170).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문용식이 고문을 받고 있을 무렵인 9월 4일 김근태가 연행되어왔다. 김근태는 1983년 9월 민청련 초대 의장으로 선출되어 2년 여 동안 수배생활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김근태는 20여 일 동안 10여 차례의 폭행과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국가보안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형을 선고받았다. 당국은 6 · 10민주항쟁 직후에 이루어진 대사면과 석방 대상에 그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1988년 6월 30일에 석방된 김근태는 1990년 5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결성선언문이 빌미가 되어 다시 구속되었고, 1992년 8월 석방되었다. 김근태는 고문 후유증으로 뇌정맥혈전증을 앓다가 2011년 사망했다. 그가 당했던 고문은 『남영동』의 50여 쪽에서 살펴볼 수 있다. 김근태가 겪은 고초의 정수는 전기고문이었는데, 다음과 같았다.

> 전기가 발을 통해서 머리끝까지 쑤셔 댈 때마다 어두운 비명을 토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의 각 부분은 해체되어 나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오직 연결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비명뿐이었습니다. 몸 전체에 시퍼렇게 핏줄이 솟고 헉헉 꺼이꺼이 목은 쉬어 가는데 이것은 멱이 따진 돼지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것이었습니다. 소리를 지른다고 강하게 전류를 통하고 소리가, 신음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혀를 이빨로 꽉 물었다고 혀를 빼라고 강하고도 긴 전류를 흘려보내고, 끙끙대면서 참는다고 또 그러고, 이들의 목표는 총체적인 혼란 · 착란 상태로 돌입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편집부, 1988: 52~53).

이후에도 남영동 대공분실에서의 고문행위는 계속되었고, 결국 박종철이 고문으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박종철이 대공분실로 연행된 것은 1987년 1월 14일이었다. 수사관들은 1985년 10월에 발생한 민추위 사건 관련자 박종운의 소재를 추궁했다.

박종철이 원하는 대답을 내놓지 않자, 수사관들은 물고문을 시작했다. 수사관들은 물고문을 반복하다가 칠성판 위에서 전기고문을 했다. 물고문과 전기고문 그리고 구타 등은 정오 무렵까지 이어졌고, 어느 순간 박종철이 숨을 멈추었다. 수사관들은 고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남영동에서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중앙대학교 용산병원으로 그를 이송해 응급처지를 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경찰은 한편으로는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의사와 언론사를 겁박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의 협조를 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을 축소 · 은폐하기 위한 공작을 멈추지 않았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제7주기 5 · 18 민주화운동 기념미사에서 진상을 폭로하지 않았다면, 사건의 전모는 묻힐 수도 있었다. '고 박종철군 추모사업회'가 1988년 4월 8일 국가와 고문 경찰과 5명, 검찰과 경찰 고위 관계자 등 28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은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적시했다.

> 피고 반금곤과 피고 황정웅은 박 군의 양손을 뒤로 돌려 묶음으로써 저항을 할 수 없게 한 다음 욕조 앞에 꿇게 하고, 피고 이정호는 뒤에서 양다리를 들어 박 군의 얼굴이 욕조의 물속으로 잠겨 숨을 쉴 수 없게 하고, 피고 강진규는 욕조 속에 들어가 두 손을 사용하여 고통을 참지 못한 박 군이 머리를 물 위로 들 때 다시 머리를 물속으로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물고문을 하였습니다.
>
> 위와 같은 물고문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한 위의 피고인은 전기고문을 하기로 하고 위 조사실 안에 있는 이른바 '칠성판'이라고 하는 전기고문용 나무침대 위에 박 군을 강제로 올라가게 하여 박 군이 두 팔과 다리를 움직일 수 없도록 로프로 박 군의 몸을 결박하고 전기가 잘 통하도록 박 군의 몸에 물을 부은 후 미리 준비된 직류의 전기회로를 박군의 양손 엄지와 검지 사이, 그리고 사타구니에 번갈아 가며 붙였다 떼였다 하면서 처음에는 전류의 세기를 약하게 하다가 물을 뿌리며 점차 전압을 높게 하는 방법으로 전기고문을 가하여 박 군에게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공포감을 주면서 박종운 군의 소재를 대라고 강요했습니다. (박원순, 2006c: 216).

04 고문 관련 시설들의 변화와 현황

보안사 서빙고분실의 정확한 명칭은 보안사 대공처 6과였다. 서빙고분실은 윤석양 이병의 폭로 직후에 폐지하기로 발표되었고, 1990년 11월 경 폐쇄되었다. 그 이후 건물과 장소는 방치되었다가 2004년에 기무사 직원들을 위한 대원서빙고아파트가 건립되었다.[6] 서빙고분실은 다른 고문시설들에 비해 일찍 철거되어서 관련 내용과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2008년 7월 16일 대원서빙고아지트에 '서빙고 수사분실 터'라는 제목의 표지석이 설치되었다. 표지석에는 "해방 후인 1957. 9. 1.부터 특무부대 공작분실로 개관, 1971. 9. 20. 보안사 수사분실로 개칭하여 사용하다가 1990. 11월 폐쇄할 때가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수많은 방첩인들의 땀과 魂이 서려있는 터로서 그 의미를 되새기고자 이 표지석을 세운다."라고 새겨져 있다.[7] 10여 년이 흐른 뒤인 2018년 1월 14일 서울시는 "빙고호텔 터", '민주인사들에게 고문수사를 했던 국군보안사 서빙고 분실 자리'라는 동판을 설치했다. 그리하여 같은 장소에 두 개의 상이한 역사와 기억을 기록한 기념물이 위치하게 되었다.

고문 관련 시설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까지 유지되었던 것은 남산의 안기부였다. 중앙정보부는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에 사무실을 두었는데, 대북 담당은 그곳에 남고, 국내 담당은 1972년 남산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했다. 중앙정보부는 1981년 4월 8일 안기부로 개편했고, 1999년 1월 21일 국가정보원으로 개명했다. 국가정보원은 1995년 서초구 내곡동으로 이전했으므로, 남산에 정보기관이 자리한 기간은 약 23년이었다. 남산 일대는 국가정보원이 이전한 이후에도 통제가 계속되었는데, 1997년 1월 10일부터 시민들의 접근이 허용되었다.

국가정보원이 사용하던 건물은 40여 동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물의 일부는 이전하면서 해체되었고, 또 다른 일부는 서울시가 이관을 받아서 해체했다. 현존하는 건물은 현 세종호텔 건물, 대한적십사자 건물,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 건물, 리빙TV 건물, 서울 소방재난본부 건물, 도시안전본부, 문학의 집, 본부, 남산 창작센터, 서울시청 별관(5국) 등이다(한홍구, 2009). 고문이 주로 자행되었던 곳은 지하 벙커인데(박원순, 2006a: 318~319), 서울시 소방방재시설이 사용한다. 본관은 유스호스텔과 청소년정보문화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

6) 나무위키 검색 : 서빙고동. http://blog.daum.net/julytlsqnkr/5301(신부의 포근한 공간).

7) http://cafe.daum.net/noljacokr/QeNW/28?q=%BC%AD%BA%F9%B0%ED%BA%D0%BD%C7&re=1(사)문화살림(위례역사문화연구회).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폭력이 자행되었던 남산의 안기부 터에 민주화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을 위한 추모공원 혹은 인권기념공원을 조성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으나(백원담, 2003; 한홍구, 2009), 여러 가지 이유들과 관계들이 얽히면서 좌초되었다. 이들은 안기부 본관을 박물관이나 전시관 혹은 기록관으로 구성하여 민주화와 인권의 신장과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했으나, 이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의 전신은 남산 신한무역이었다(박원순, 2006b: 352). 남영동 대공분실은 '대간첩 작전 수사'를 목적으로 1976년 10월 2일 건립되었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계속 운영되다가 1991년 경찰청 보안분실로 개칭했고, 2001년까지 검거활동을 했다(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2004: 324). 대공분실의 성격이 전면적으로 바뀐 것은 노무현 정부에서였다. 2005년 7월 26일 허준영 경찰청장이 재직하던 시기에 '인권보호센터'로 개칭되었고, 10월 4일 시민에게 개방했다(김명식, 2017).

이 건물은 건축가 김수근이 설계했는데, 5층으로 건립되었다가 1983년 12월에 7층으로 증축되었다. 조사와 고문이 주로 이루어진 것은 5층이었다. 다른 층들의 창문과 달리 5층은 폭이 좁은 19개의 창문으로 특이한 모습을 띤다. 연행된 사람들은 건물 뒤편의 나선형 계단을 눈을 가린 채 올라갔다. 김근태가 고문을 당한 장소는 515호였고, 박종철이 고문을 당한 장소는 509호였다. 2008년 6월 4층에 인권교육 자료실과 박종철 기념 전시실이 만들어졌고, 509호 내부 시설들은 고문이 이루어졌던 당시의 모습으로 재현되었다(김종철, 2008: 274). 이후에 515호가 공개되었으며, 이철성 경찰청장이 취임한 뒤에는 "경찰 인권사료 전시관"이 개관했다.[8] 서울시는 박종철이 희생당한 날에 맞춰 2018년 1월 14일 "남영동 대공분실 터", '서울대학생 박종철 고문사망 등이 있었던 대공분실 터'라고 새긴 동판을 설치했다.

8) '썰렁한 '박종철기념관' 옆에 두 배 크기 '경찰인권전시관'이?' 「오마이뉴스」. 2018. 1. 3.

05 맺음말

폭력의 대표적인 행위들은 전쟁, 고문, 살인, 학살 등이다. 윤리적 가치와 인간의 존중감이 형성 및 실현되지 못한 사회에서는 고문이 만연하거나 자연화 된다(Michaud, Y., 1990: 166~179). 인간이 집단을 이루고 정치 · 사회적 행위를 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질서와 안전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과 제도의 일부로 폭력의 '정당화'와 '도구화'가 슬며시 똬리를 틀었다.

한국에서도 국가폭력과 고문이 만연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정치 · 사회적으로 고문이 논란이 된 경우는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러한 일을 수행한 주요 주체는 안보와 안전의 첨병을 자부했던 정보기관들이었다. 그런데 정보기관이 없는 국가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목적과 형식 그리고 역할과 기능에서 차이가 있을 뿐, 정보기관 혹은 유사한 역할과 기능을 하는 조직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확인된다.

한국에서 고문 행위는 특정한 사건들을 계기로 단계적으로 축소되었다. 물론 근절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지난 정부들이 보여주듯이, 정보기관들은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했다. 이들 기관은 안보와 비밀 등을 방패로 법률이 규정한 경계와 기준을 넘나들었고, 이를 정치행위로 합리화했다. 사회구성원의 감시와 통제를 벗어난 정보기구들은 불명예와 불법성을 망각하고, 과거로 언제든지 회귀하려는 속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정보기관의 활동과 동향은 고문과 명백한 탈법 행위 등이 크게 사건화 될 때 조금씩 세상에 알려졌다.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정보기관과 국가폭력 그리고 고문은 사회구성원들에게 접근이 가능한 이야기 소재가 되었다. 그런데 이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자료와 기록은 희박하다. 정보기관에서 이루어진 고문에 관한 자료와 기록은 피해자의 증언과 기억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피해자의 증언은 고문과 사건에 관한 정황의 극히 일부를 말하고 있을 따름이다.

대조적으로 정보기관이 생산한 공식 자료와 기록은 은폐되어 있다. 정보기관이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갖고 운영되었으며, 누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려진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정보기관 근무자들은 자신의 활동을 안보와 애국으로 자평하지만, 이를 드러내는 것에는 소극적이거나 음성적이다. 그러므로 고문이 이루어졌던 조직 구조와 체계 그리고 운영과 정당화의 논리 등이 대부분 비밀에 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보기관의 활동이 그나마 드러난 사건은 5 · 18민주화운동이었다. 5 · 18민주화운동 전반에 깊숙이 개입했던 보안사의 활동에 관한 자료가 어느 정도 공개되었던 것은 국회 청문회가 개최되었고,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정보기관이 자행한 폭력과 고문의 기록 및 흔적을 양지로 이끌어내는 것이 험난하고 장벽이 높음을 의미한다.

정보기관들이 사용했던 건물과 장소들은 해체 혹은 전용되는 추세이다. 현장성과 장소성을 유지한 경우가 드물다. 서빙고 보안사 시설은 오래 전에 사라졌다. 남산 안기부 시설들은 상당부분이 해체되었고, 일부만 개조 및 변형되어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현장성이 잘 보존된 시설은 남영동 대공분실이다. 이 또한 내부는 상당히 달라졌지만, 외형은 대체로 유지되고 있다. 오늘날 남영동 대공분실에 대한 정치사회적 관심이 높고 영화 등 문화적 소재가 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원형이 보존되고 있고 관련 증언이 많기 때문일 터이다.

고문은 인간성을 말살하고, 사회관계를 단절시켰으며, 불신과 공포 그리고 체념을 심어주었다(남규선, 1997). 한국인들은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시대를 오랜 기간 살아야 했다. 그러므로 이를 반면교사로 삼기위해서는 비극과 상흔을 보듬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차단하는 거점으로 고문 관련 시설들의 재고가 필요하다. 고문에 의한 후유증과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피해자를 치유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도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억 활동의 장소가 요구된다. 이는 사회구성원의 균열과 반목을 회복하는 터전이 될 것이며, 사회적 연대의 토대로 작용할 것이다.

참고문헌

고문 등 정치폭력 피해자를 돕는 모임(KRCT). 2004.『고문 인권의 무덤』. 한겨레신문사.

공진성. 2009.『폭력』. 책세상.

국가정보원. 2007.『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 – 주요 의혹사건 편 上권(II)』.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2007.『10 · 27법난 사건 조사결과보고서』.

김 원. 2016. "공안사찰 : 감시와 자기검열의 일상화."『내일을 여는 역사』63호. 서해문집.

김기선. 2008. "저 캄캄한 '양지'의 꿈 : 석관동 중앙정보부 옛 청사."
『그날 그들은 그곳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김두식. 2011.『'홍성우 변호사 인권변론 기록'의 가치와 과제』.『법과 사회』41호.

김두식. 2012.『고문공간으로서의 남영동 대공분실과 그 이용자들』.『법과 사회』43호.

김명식. 2017.『건축은 어떻게 아픔을 기억하는가』. 뜨인돌.

김병진. 1988.『보안사』. 소나무.

김종철. 2008. "고문으로 얼룩진 오욕을 뒤로 하고 인권센터로 바뀐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
『그날 그들은 그곳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김학민. 2017.『만들어진 간첩』. 서해문집.

김희경. 1993. "안기부의 '김삼석 김은주' 남매간첩 조작 의혹." ≪월간 말≫ 12월호.

남규선. 1997. "안기부 밀실수사가 인간성에 미치는 영향." ≪월간 말≫ 2월호.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엮음. 1987.『나의 손발을 묶는다 해도』. 거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2004.『국가보안법 적용상에서 나타난 인권 실태』.

박영주 · 신행우. 2007.『사회적 폭력 : 5 · 18에 나타난 고문을 중심으로』.『민주사회와 정책연구』12호.

박원순. 2006a.『야만시대의 기록 1』. 역사비평사.

박원순. 2006b.『야만시대의 기록 2』. 역사비평사.

박원순. 2006c.『야만시대의 기록 3』. 역사비평사.

박종대. 1999. "안기부 조사실에서 절감한 '강압의 덫'." ≪월간 말≫ 9월호.

백원담. 2003. “남산 안기부 터 유스호스텔 웬 말?” ≪민족 21≫ 31호.

서 승. 2018.『옥중 19년』. 진실의 힘.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주의와사회운동연구소 외.
2004.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기본계획(안) 수립연구 용역≫.

손홍규. 2008. “인권 유린의 현장, 남산 옛 안기부터를 찾아서.”
『그날 그들은 그곳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안 진. 1996.『미군정기 억압기구 연구』. 새길.

안영배. 1990. “보안사.”≪월간 말≫ 11월호.

안영배. 1991. “국군기무사의 조직사건 조작술.” ≪월간 말≫ 9월호.

오태영. 2017.『조작된 간첩, 파레시아의 글쓰기』.『동막어문학』 73호.

유응오. 2005.『10 · 27법난의 진실』. 화남.

이윤정. 2015.『한국경찰사 근현대편』. 소명출판.

이정훈. 2004. “무시무시하던 그 이름 ‘對共’ 퇴출.” ≪주간동아≫ 432호.

재경대구경북민주동우회 외. 2005.『인혁당사건, 그 진실을 찾아서』.

정호기. 2007.『박정희시대의 ‘공안사건’들과 진상규명』.『역사비평』 8월호.

조현연. 2000.『한국 현대정치의 악몽 : 국가폭력』. 책세상.

편집부. 1988.『남영동 : 김근태 고문 및 옥중기록』. 중원문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구인권위원회. 1982.『복음과 인권』.

한국철학사상연구회 기획. 2015.『망각과 기억의 변증법』. 이파르.

한성훈. 2013.「“권력의 중심에 선 정보기관 : 국군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
『내일을 여는 역사』 12월. 서해문집.

한홍구. 2009. “서울, 민주화운동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교육≫ 7월호.

Michaud, Yves. 1978. 나정원 역. 1990.『폭력과 정치』. 인간사랑.

Sofsky, Wolfgang. 1996. 이한우 역. 2010.『폭력사회』. 푸른숲.

1970~80년대 '고문' 관련 시설의 운용과 변화 : 서빙고 보안사, 남산 안기부, 남영동 대공분실을 중심으로

KDF REPORT : Issue & Review on Democracy

발행일 2018년 6월 10일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DF,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KD,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edit@kdemo.or.kr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

이 책자의 내용은 본 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
본 연구소의 승인없이 전제 및 인용을 금함

06
9 772508 324001
ISSN 2508-3244